

# 궁지 몰린 한국당... 등 돌린 여야 4당

### 국회 정상화 합의 반복 파장 ... 여야, 의사일정 강행 방침 민주 "새 협상 불가"...바른미래 "국회 파행 한국당 책임"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 대표 합의를 반복한 후 첫날인 25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험격한 입장차만 보여국회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일축한 반면,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급한 민주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의 반복을 '무책임하다'고 질타하고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효로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추경 등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진전된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선별적 상임위 복구 방침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의외위에 참석,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의 즉시 처리에 반대하다 퇴장했다.

이번 가운데 야 3당은 한국당의 합의 반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제히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며 "국회법 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성문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일하기 싫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총사퇴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산하라"며 "본인들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든 말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5당 대표 '태극기 흔들며'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69주년 기념식에서 6·25 노래 제창에 맞춰 여야 5당 대표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한빛 1호기 사태, 원안위 책임감 없다” 질타

### 과방위 전체회의...한국당 전원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로 열출력 이상이 발생했던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을 점검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빛 1호기 사건과 관련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거론하며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원안위는 전남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이 발전소 직원의 운전미숙, 원자로 출력 계산 착오, 무자격자의 운전 등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내

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번 사태가 (원자로 출력에 대한) 계산 착오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어제 발표를 보면 한수원에만 책임을 전부 전가하고 원안위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대한 책임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내용·책임·의지가 없는 3무(無) 조사"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갈지에 대한 대책을 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분명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인적요소 관리, 비상운전절차서 등을 사전에 점검해놓고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최종 발표 이전에 다시 한번 현안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업무보고를 위해 엄재식 원안위원장 외에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 “경제 기조 유지돼야 성과”

### 김상조 靑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다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그간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 영역이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 주도성장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오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개특위 연장’ 공은 원내대표로

### 30일 종료...3당 “28일까지 선거법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소위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위원들은 정개특위 연장 여부를 각 당 원내대표에게로 넘기로 했다.

앞서 심상정 위원장은 오는 30일 종료하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낸 바 있다.

특히,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28일까지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선거법을 다수가 연합해 밀어붙이고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남은 시간 안에서라도 충분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내용에 대해 검토하

고 특위가 의결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절박한 마음으로 참석해서 합의를 논의하고 수정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3일간 특위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야 12월 안에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 목, 금 회의를 잡아냈다.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금요일에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표결 여부 등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특위는 종료된다. 정개특위에서 이때까지 선거법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넘어가게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가라운지

## 광주 먹거리 5개 주력사업 국비 지원 요청

### 송갑석 민주당 의원

송갑석 민주당 의원(서구 갑)은 25일 내년 광주지역의 국비확보 위해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송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14개의 산자부 사업예산 중 미래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연계된 5개 주력사업의 미반영액 148억원에 대한 추가반영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송 의원은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축인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은 각종 연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자동차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한 광주지역 예산 반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 장관은 "광주의 주요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 지원금 지원법 발의

### 서삼석 민주당 의원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축하금이나 농가 도

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자녀 양육 등에 드는 비용 보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지역 여성들은 여전히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